

스트레스때문에? "김정은 권력, 조금씩 김여정에게 이양중"

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
"김정은,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
김정은 아픈 것도, 김여정 후계자 결정도 아니다"

국가정보원이 20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 김여정 등에게 권력을 이양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선 일단 부인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김정은 동향에 대해 위임 통치라는 말이 나왔다"며 "김여정이 후계자로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임 통치에 대해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권력이 양 이유에 대해선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의 그동안 9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나보다"며 "두 번째는 정책 실패 시 김정은에게 총알이 튀는 것을, 실패 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 차원"이라고 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최근 북한의 수해 피해 상황에 대해 "심각했다"고 말하며 "특히 김정은 집권 후 최대 피해 기록한 2016년보다 농경



지 침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코로나 19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발생 인원이 없다 얘기하고 있지만 국경 봉쇄 장기화로 최근 외화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금년도 주요 건설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당 핵심 기관들이 긴축 운영하는 등의 동향이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 황강댐 폭파를 한 것에 대해선 "검토했을 정도로 긴박한 사정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경제 박봉주 군사 리병철' 김정은, 中 집단지도 흥내?

[北 분할통치]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권력... 김여정은 대남·대미 전략 총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부 권한을 여동생 김여정 등 소수 측근에게 분산하는 이른바 '위임 통치'에 나선

것은 기존의 만기친람식 절대통치 방식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20일 "일단은 김정은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보인다"며 "만약 제도화할 경우 김정은 이후엔 중국식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 특성상 위임 통치는 불가능하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김여정·김덕훈·최부일·리병철 주목

국정원은 20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대남·대미 사업을 비롯해 김정은의 권한을 가장 많이 넘겨받은 인물로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을 꼽았다. 국정원 측은 "사실상 2인자"라고 했다. 김여정 2인자설은 지난 6월 북한이 김여정 담화를 시작으로 3주간

대남 파상 공세를 퍼부을 때도 제기됐다. 내치는 김정은, 외치는 김여정 '김정은 남매의 굿감·배드감 역할 분담' 등이 그것이다. 당시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란 표현을 썼다.

이 밖에 경제는 박봉주 국무위 부위원장장 김덕훈 내각총리, 군사는 최부일 노동당 군정지도부장(군 관리)과 리병철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무기 개발)이 각각 총괄하는 구조라고 여야 정보위 간사들이 전했다. 인민군 농구 선수 출신으로 김정은의 청소년 시절 농구 과외를 해준 인연으로 측근이 된 최부일을 제외하면 테크노크라트(전문 관료) 출신들이다. 화학공장 책임비서 출신인 박봉주는 김정일 집권 시절 총리로 발탁돼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주도한 경제통이고, 김덕훈도 기계공장 지배인 출신이다. 공군사령관 출신인 리병철은

▲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2014년 8월 21일 북한군 염소 우리 앞에서 담배를 손에 낀 채 웃으며 군인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1등공신이다.

◇힘 실리는 정치국 상무위 원회

전문가들은 분야별 총괄역들 가운데 박봉주·김덕훈·리병철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멤버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실질적 권한보다는 상징적 지위로 여겨져온 상무위원회에게 실질적 힘이 실리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 중 김덕훈·리병철은 지난 13일 정치국 회의를 통해 새로 상무위원이 됐다. 나머지 상무위원은 김정은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다. 이 때문에 정치국 상무위원 7명에게 권력이 분산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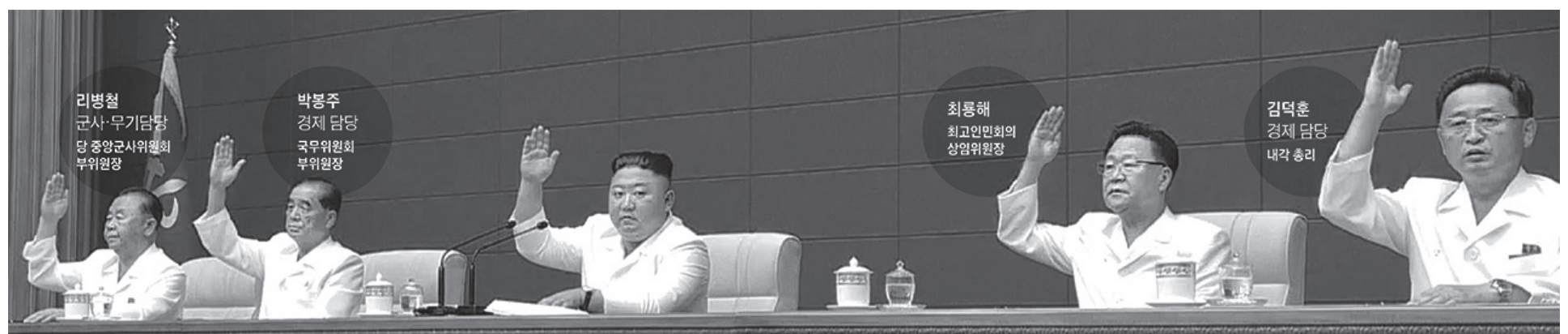
중국 공산당 집단지도체제와 유사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수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고, 2인자 지위도 혈육(김여정)에게만 허락되는 전형적인 왕조"라며 "세습이 불가능한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중국식 집단지도체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계 봉착한 만기친람식 통치

김정은은 2011년 12월 집권 이후 줄곧 만기친람식 통치를 해왔다. 건설 현장 등에서 "잡초를 뽑아라" "내장재를 바꾸라"며 깨알 지시를 내리는 식이었다. 이 같은 통치에 대해선 시간 많은 전문가가 위험성을 지적해 왔다. 건강 문제 등으로 김정은의 통치 활동이 중단될 경우,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로 북한의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가 본격화한 2016년 이후로는 통치 환경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 전방위 대북 제재가 가해지는 등 북한·북핵 문제가 국제 이슈화하며 내치에만 집중할 수 있던 김일성·김정일 시절과는 다른 세상이 된 것이다.

전직 외교부 고위 관리는 "작년 하노이 노딜로 인한 좌절감에 경제난,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김정은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된 것이 통치 방식에 변화를 준 이유 같다"며 "건강 때문이라도 만기친람식 통치를 계속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통계 왜곡하다 부도난 그리스·아르헨, 남의 일이 아니다

코로나 사태 외중에 올 2분기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4.8% 늘어나자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과감한 정책 대응 덕에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

면 개선이라 할 수 없는 수치였다. 2분기 중 가계가 일해서 번 근로소득·사업소득은 4~5%씩 줄었다. 여기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으로 16조원을 뿌려 공적

이전소득을 127%나 늘린 결과 전체 소득이 증가한 모양이 됐다. 세금으로 현금 뿌린 결과일 뿐이다. 고용 침체와 자영업 경기 위축이라는 민생 경제의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

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를 '분배 개선'이라며 억지 해석을 하니 경제 살릴 근본적 처방 대신 임시방편의 현금 뿌리기 정책만 계속하게 된다. 경제는 살리지도 못하고 국가재

정만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이다.

객관적 현실 진단 위에서 수립돼야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이다. 그 현실을 정확히 보

여줘야 하는 것이 국가 통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다. 통계에 기반해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정책 목표를 정하고 이를 합

송정현 변호사 사무소

www.songlaw.ca

부동산, 상법, 회사법, 이민법, 유언/상속법

T: 403-764-0231 / E: daniel@songlaw.ca

#312 - 14 Street NW, Calgary, Alberta T2N 1Z7